

# 부동산 경기 악화에도 잇단 아파트 인허가 신청

### 광주 건설업체 자투리 땅 아파트 추진... 시민단체·주민 반대 소태동 등 3건 상정...주택수요 감안해 공급 조율 목소리도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파트 개발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상업지역의 고층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이 남아 있는 도심 자투리 땅에는 중층 아파트들이 연이어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단체, 인근 주민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미분양, 아파트 가격 급락 등을 대비,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30일 열리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 상향'하는 아파트 건립 계획안이다.

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을 중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쇠락지역 재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개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 등에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이미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됐거나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심 자투리 토지마저도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날 상정 안건은 동구 소태동 459-1번지 일원 2만5460㎡에 13-16층 높이 288세대를 공급하는 계획, 북구 운암동 228번지 일원 4만3601㎡에 24-29층 높이 508세대를 공급하는 계획, 북구 동림동 289-1 일원 9674㎡에 15층 높이 2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 등이다. 앞서 2건은

주택조합이, 1건은 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구 소태동의 경우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재해 가능성, 경관 침해, 도로 및 교통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상향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반대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배정하기로 했다.

시 역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의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저촉이 없는 토지소유주 및 건설업체의 개발 신청이 잇따르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아

파트 개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관계도 있다.

그러나 도시 곳곳에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이 올해 민간아파트 공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1만6000여세대가 공급되며, 이는 지난해 6000여세대의 2.6배 수준이다. 여기에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만50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도 예정돼 있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아파트로만 채워지고 있는 미래 광주의 도시공간도 감안해야 한다"며 "중상향은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구제역 '주의' 단계 상향

### 가축 반입 제한 확대 강화

경기도 안성 쫓소농장에서 이어 인근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남도가 위기단계를 '주의'로 상향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전남도는 경기도 안성 쫓소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축이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단계 '주의'로 상향하고 추가 우제류 가축 반입 제한 확대 등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이후 곧바로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며칠 앞둔 만큼 앞으로 3주간의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방역조치는 ▲경기·충북·충남 3개 지역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 제한

▲31일까지 쫓소 3만 마리 긴급 일제접종 및 4주 후 항체양성을 확인검사 ▲거점 세척·소독시설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축협·축산농가·행정기관 협업체계 구축 ▲설 명절 귀성객 유의사항 홍보 등이다.

전남도는 앞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농가·기관·단체 등에 전화·문자 상향 전파 ▲도 경제지역 5개소를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히 ▲매일 영상회의에서 방역상황 점검 ▲의사환축 발생지역(안성) 도내 우제류 반입 금지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 동원 긴급 전화예찰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 소독 실시 ▲백신접종 누락 가축 긴급 백신접종 등을 실시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은 우리나라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며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같이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방역조치는 ▲경기·충북·충남 3개 지역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 제한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농·수·축협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9일 광주시 서구 서창농협 본점 대강에서 열린 서창농협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이용섭 시장 “트라우마센터 광주유치 총력”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열린 광주시 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립 트라우마센터 분원 유치에 총력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에 따르면 국립 트라우마센터 분원 설립의 최적지로 광주가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분원은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추진되고 총사업비 70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전체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인권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시장은 “광주는 2012년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개원해 트라우마 치유 관련 사업수행 경험 축적과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

크가 장점이다”며 “옛 국군통합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과 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곳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29일 동구를 시작으로 3월까지 5개 구를 찾아 자치구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날 동구청은 찾은 이 시장은 구청 간부들과 동구 현안을 논의한 뒤 월남동 공영차고지 현장과 동구 문화센터를 찾아 주민 등 300여 명과 대화를 했다.

이날 동구는 구정현황 보고를 통해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 ▲광주수영진흥센터 동구 건립 ▲동명동 카페거리 일일 지중화 사업 등 4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파에 재개발 사업 세입자 내쫓지 못한다

### 광주시 '주거환경정비비조례' 입법예고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는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도록 했다. 세입자 등의 이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절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 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 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결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30일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시·구의원 전원이 참석해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의지를 밝힌다. 또 광주시당 차원에서 마련한 국외연수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최근 경북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폭행사태를 계기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TF팀은 이경호·김광란 시의원 등 지방의원 7명, 조병남 시장 사무처장, 김보현 시장 정책실장,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시장당 위원장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팀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